

호남-제주 해저고속철 뚫리나

윤증현 장관 “미래 비전에 꼭 필요”

연구용역비 내년 예산에 반영 기대

이용섭의원 밝혀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반영 요구에 대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는 일찍 시작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한다”며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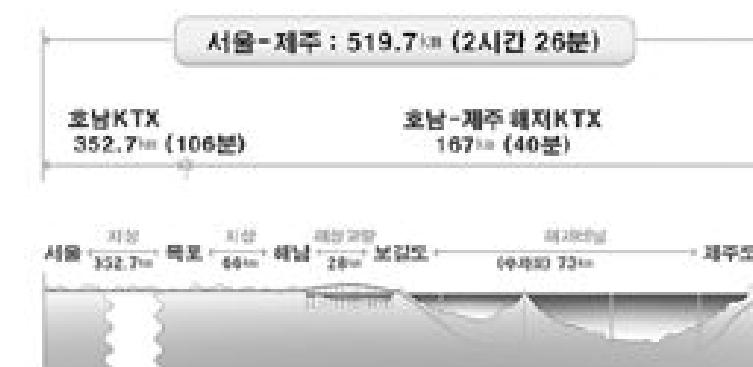
이같은 윤 장관의 답변은 이 의원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착

공에서 완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연구 용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타당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물류의 혁명을 가져올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총 길이 167km로, 목포~해남은 지상구간으로 66km, 해남~보길도는 해상교량 28km, 보길도~추자도~제주는 해저터널 73km다.

사업비는 지상구간 2조8천억원, 해상교량 3조원, 해저터널 8조8천억원 등 모두 14조6천억원이 투입되며, 타



당선 조사 기간을 포함해 총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저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목포에서 제주까지 40분이 소요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도 2시간26분이면 갈 수 있다.

교통연 구원은 또 관광·물류 유통 수요를 고려하면 경제성도 있으며, 현재 국내 기술로 해저터널 굴착이 가능하고 제주도 지반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호남~제주 해저고속 철도 사업은 호남고속철도를 제주까

지 해저터널로 연결함으로써 호남이 국토 남단의 종착역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이 될 것이다”며 “나후된 호남권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저터널 사업의 모범 사례가 돼 한국이 해저터널 기술의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현경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 변경땐

광주 879억·전남 1,839억 재정보완”

국회 행안위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되 지방자치 보조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분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에 광주에서는 최대 879억원, 전남에서는 1천839억원의 재정 보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원안 대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 재정 감소액이 5천91억원, 2조6천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정부 원안을 조정한 한가운데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화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쳐 주민세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율(가계·비 영리단체 소비) 비율과 지역별 세원 편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3단계로 적용해 지방소비세의 배분액을 정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축소한 정부의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을 수정,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교부세율을 유지도록 했다.

또 재산세 및 취·등록세 등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남은 세원은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됐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세수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 시·군·구에 균형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전남 등 재정이 취

약한 지역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당초 자금 응자 방식으로 지방에 지원할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향후 10년 동안 연간 3천 200억원씩 조성하기로 한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배분 방식을 지방소비세 규모가 부가세의 10%로 확대되기 전 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 직접 지원토록 조정, 추가 재정 보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광주·전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됐지만 지방교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을 변경해서 그 피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지방교부세율을 인하한은 교과부,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 및 예산과 연계돼 있어 법사위 심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5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2009 광주시 문화예술상 시상식’ 도중 수상자들이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문화예술상 시상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 北에 전달

정부는 북한에 제공키로 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오는 1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북한과 연락관 협의

를 한 결과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릴란자(타미플루 대체약) 10만명분,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손세정제 등을 북측에 오는 18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과 관련, 제반경비를 포함해 약 178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협) 서면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만명

- 김종우



이젠 산타도 해먹기 힘들어 졌다

광주시 U대회 유치 ‘가장 뛰어난 시책’ 평가

시민·공무원 3,405명 설문

광주시가 한 해 추진한 시책 중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성공’과 ‘제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이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공무원 등 모두 3천4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정 성과부문과 창의혁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2009 광주시정 올해의 BEST5’로,

‘2015하계U대회 유치 성공’,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개원’, ‘지역현안사업 국비 2조원 달성’, ‘무등산공원 옛길 복원사업’, ‘녹색성장산업 광산부야 투자유치’를 선정했다.

1위를 차지한 ‘2015 하계U대회 유치 성공’은 광주 역사상 최초로 세계 3대 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이, 2위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현경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보험 설립 국무회의 통과

신·경분리도 ‘탄력’

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 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

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조각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반발에 따라 한때 백지화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보험이 부활시켰다.

/연합뉴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란

“국민 의료비 상승” “소비자 선택권 제고”

‘의료법인 도입 연구’ 용역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국민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동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응용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영리병원 도입을 주진 하더라도 기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 설립되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현 건강보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러나 두 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각 주장은 서술하는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대에서도 보건산업 진흥원은 부담이 최대 4조3천억원 늘어나고 상당수 중소병원도 폐쇄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KDI는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국민의료비가 2천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능기계 구입자금 증자율 3%

(1년 기자 5년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창고에도~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일정기대 5,000원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